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의 박민우 건설정책관과 김재규 건설경제과장이 참석했고, 학계에서는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김한수 세종대 교수, 박종일 동의대 교수가, 연구원으로는 이상호 GS연구소 소장,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혁 건설산업정보센터 실장이, 협회에서는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김재서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김종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장이, 건설업계에서는 천길주 현대건설 전무,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 박용래 용성산업개발 대표가, 건설 노조 측에서는 김진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해양부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연구원, 협회, 업계, 노조 등 각 분야에서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은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하도

급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 도입 △해외건설의 원·하도급사 간 공생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종합과 전문건설사가 해외시장에 동반진출 지원방안 모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책임 범위 법제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건의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박종일 동의대 교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하위 법령에 기계설비 발전계획 포함 △기계설비 관련 기준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비전

건설산업의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

2. 목표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세가지 정책 목표 설정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내실화)

-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우수업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 ENG·기능인력, 자재·장비 산업 등 기반분야를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성장동력 창출 (외연확대)

- 국내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수요 발굴 및 부가가치 제고 추진

건설산업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동반성장)

-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 확립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 가격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 도입, 해외건설의 원·하도급사 간 공생발전 가이드라인 수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법제화 건의 -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 가격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 도입

국토부에서는 가격경쟁과 운찰제로 전략한 정부

입찰에서 최고가치를 지향하고 적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종합평가낙찰방식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다만, 정부공사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의 평가만으로는 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영국 등 선진 외국은 공사입찰 시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하도급 가격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낙찰방식에도 이러한 사항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일본(전문공사심사형 종합평가방식), 영국(프라임계약방식) 등

해외건설의 원·하도급사 간 공생발전 가이드라인 수립

우리 업계도 해외 플랜트시장에 많은 플랜트 전문업체가 참여해 외화벌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활성화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젠 외형과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내 건설 산업에서는 공생, 상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해외건설 쪽은 각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의 출혈경쟁과 저가수주가 고스란히 하도급 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해외건설의 원·하도급사 간 공생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과 전문건설사가 해외 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법제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등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하도급업계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이렇게 동 제도를 아무리 강

화하여도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기관이 보증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개정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약관으로만 명시된 보증 책임범위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활성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국가공사에 도입된 지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범사업만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4차 진흥계획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확대 내지는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약제도입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건설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4차 진흥계획에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와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관련 기준법 제정돼야”



박종일
동국대 교수

기계설비관련 기준법 제정

국가에너지의 상당부분이 건축물에서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들 대부분이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

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인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신규 건설수요에 중요부분을 차지할 노후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조차 전무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계설비관련 기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하위 법령에 기계설비 발전계획 포함

신규 건설수요 발굴을 위한 녹색건설사업과 노후 시설물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건설 분야의 역할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정의를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50~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냉·난방, 환기 등 기계설비의 에너지효율과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의 핵심인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R&D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법령에 에너지사용주체인 기계설비에 대한 발전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